

중국 신(新)지도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양평섭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장 (psyang@kiep.go.kr, Tel: 3460-1121)

최필수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부연구위원 (pschoi@kiep.go.kr, Tel: 3460-1022)

이호진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연구원 (hyojinlee@kiep.go.kr, Tel: 3460-1057)

차 례 ● ● ●

1.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 경제 평가
2. 18차 당대회의 주요 경제정책 이슈 분석
3. 신지도부의 경제정책 방향 전망
4. 평가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

- ▶ 후진타오 시대에 중국은 고도성장에 따라 양적으로는 2001년 세계 6위에서 2010년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으나, 구조적으로는 '중등소득의 함정' 과 '체제이행의 함정' 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지도부의 정책 향방에 주목해야 함.
 - 시진핑(習近平)을 위시한 중국 5세대 지도부는 공통적으로 안정 지향성과 풍부한 지방 실무경험에 바탕을 둔 집정 경험 및 국제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집단 지도체제 속에서 중국의 구조조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해야 함.
- ▶ 18차 당대회를 통한 당장(黨章) 개정을 통해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 이 공산당 지도이념으로 격상됐으며, '생태문명 건설' 이 정치·경제·사회·문화와 함께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오위일체(五位一體)' 구성 요소로 제시됨.
- ▶ 18차 당대회 업무 보고를 통해 향후 중국 경제 운용의 방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됨.
 - 전면적 소강사회의 완성 목표로 오는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과 주민소득을 2010년의 두 배로 증대시키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매년 7% 성장해야 함.
 - '신형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의 동반 발전을 강조했으며, 정보화와 공업화의 융합 발전, 공업화와 도시화의 시너지 창출, 도시화와 농업현대화의 상호협조를 제기함.
 - '경제체제 개혁을 위해서는 비공유제 발전 장려 재정 세제 개혁 강화 금융개혁 확대 환율과 금리 시장화 개혁 인민폐 자본항목 자유태환 점진 실현'에 역점을 둘 것임을 밝힘.
 -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의 핵심이 국내소비 확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도시화 추진에 있음을 강조함.
- ▶ 중국이 초고속 성장 시대에서 벗어나 중성장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대중국 주력 수출상품 구조전환과 수출시장 다변화 대책, 중국의 신성장 축인 지방과의 경제협력강화 대책, 중국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종합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함.
 - 한 중 FTA의 조속한 체결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한 중 간 통화스왑 확대 및 무역결제 통화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도시화, 서비스화, 자원절약 및 친환경 사회 건설, 민생 등 중국의 발전방식 전환과 관련된 새로운 기회에 주목해야 함.

1.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 경제 평가

■ 후진타오 시대의 가장 큰 경제적 성과는 고도성장에 따라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것으로, 중국은 2001년 세계 6위에서 2010년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함.

- 2002~11년 중국경제는 연평균 10.6%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여¹⁾ 경제규모(GDP)가 2001년 10조 9,700억 위안에서 2011년 47조 1,600억 위안으로 10년간 4.3배 성장함.

○ 1인당 GDP는 2001년 8,622위안(1,042달러)에서 3만 5,181위안(5,443달러)으로 4.1배 늘어남.

■ 그러나 양적인 팽창과 더불어 구조적으로는 중국경제가 ‘중등소득의 함정’²⁾과 ‘체제이행의 함정’³⁾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중등소득의 함정) 중국은 2011년 1인당 GDP가 5,443달러로 중등소득 국가에 진입하였으나, 2010년부터 노동 가능 인구의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계층간·지역간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전통산업의 공급과잉 문제와 부패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 (체제이행의 함정) 칭화대 연구그룹은 경제발전의 왜곡, 체제개혁의 정체, 사회적 유동성 저하와 사회구조의 고정화, 사회 안정을 위한 정부의 비용 급증, 사회 붕괴의 징조 증대 등 다섯 가지 병폐로 인해 중국이 ‘체제이행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함.

■ 따라서 신(新)지도부의 최대 과제는 ‘중등소득의 함정’과 ‘체제이행의 함정’에 빠질 우려로부터 중국경제를 구제하는 것임.

- 세계은행과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이 공동으로 발표한 『2030년 중국』에서 향후 20년간 중국이 추진해야 할 과제로 ① 시장경제 기반 강화, ② 기술혁신, ③ 청정발전, ④ 만인에게 평등한 기회와 사회보장 제공, ⑤ 지속가능한 재정시스템 구축, ⑥ 세계와의 호혜공영 관계 구축 등 6대 과제가 제시됨.

- 칭화대 연구그룹은 ‘체제이행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① 시장경제, 민주정치, 법치사회를 보편적 가치로 하는 세계문명의 주류에 편승하고, ② 정치체제 개혁을 가속화하여 정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존 이익집단의 권력을 제약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③ 특히 개혁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금과 같이 지방에 위탁하지

1) 덩샤오핑의 집정 시기(1979~92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9.5%, 장쩌민 집정 시기(1993~2002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9.8%였음. 후진타오의 18차 당대회 보고 시 과거 5년과 10년의 평가에서도 중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6위에서 2위로 격상된 것을 높이 평가함.
2) ‘중등소득의 함정’은 2007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동아시아의 르네상스』 보고서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일정 1인당 소득수준에 도달한 국가가 발전전략과 발전패턴을 전환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성장동력 부족으로 경제가 장기간 정체 상태에 빠지는 것을 의미함. ‘중등소득 함정’에 빠진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잉여 노동력 감소, 산업고도화 정체, 빈부격차 확대, 환경 악화, 관료의 부패 등을 겪었고, 이로 인해 그동안 축적된 성장제약 요인이 현재화되어 성장률이 저하되고 사회가 불안해짐.
3) ‘체제이행의 함정’은 칭화대 연구그룹이 제기한 개념으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유기업 등 기득권 이익집단이 변혁을 저해하고, 이행기의 ‘혼합형 체제’를 고집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이 왜곡되고 격차가 확대되며 환경과 문제점이 심각해진다는 주장임(開放時代 2012년 제3기).

않고 중앙 상층부에서 직접 설계하고 집행할 것을 건의함.

- 중국의 신지도부는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면서도 분배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 2011년 현재 중국의 1인당 GDP는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1만 1,316달러로, 비슷한 시기에 많은 국가들이 요소 비용 상승을 고부가가치 창출로 전환시키지 못해 선진국 진입에 실패한 바 있음.
- 중국은 요소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 부문을 개혁하고, 과잉·노후 생산시설을 포기하고, 지방정부의 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동시에 2020년까지 연 7%의 성장을 지속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2. 18차 당대회의 주요 경제정책 이슈 분석

가. 5세대 지도부의 특성과 경제정책 성향

- 5세대 지도부의 공통적 성향은 안정 지향성과 풍부한 지방 실무경험에 바탕을 둔 집정 경험과 국제감각임.
- 5세대 지도부는 10대 후반에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를 직접 경험한 후 공산당원으로 성장하였으므로 안정적인 당의 집정(執政)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둘 것임.
 - 지방근무를 통해 현지 경제운용에 성공한 경험이 있으므로 서민 경제문제에 대한 이해가 깊고, 성급 지도자 시절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교류 경험과 잦은 외국방문으로 국제감각도 뛰어남.
- 시진핑(習近平)은 경제적으로는 친시장 개혁파, 정치적으로는 온건 보수적인 인물로 평가됨.
 - 시진핑은 푸젠성(福建省)에서 17년을 근무하며 현장 감각을 익혔는데, 당시 매우 적극적인 시장경제 개혁을 실천했으며, 이 시기 ‘작은 정부(有限政府)’를 주창하며 민간 부문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
 - 이후에도 저장성(浙江省)과 상하이(上海) 등 동부 연안의 발달한 지역에서 주로 공식 생활을 함.
- 구체적인 정책 설정에서 계파간·인물간 우선순위가 나뉘는 조짐이 있으나 집단 지도체제의 특성상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은 적음.
- 5세대 지도부는 정치적 혼란기에 파격적 승진이나 일인 지도자의 낙점에 의해 성장하지 않고, 중국의 복잡하고 험난한 관료정치(관료정치)의 미로를 차근차근 헤쳐 나온 인물들이기 때문에 집단지도체제라는 ‘시스템의 정치’에 매우 익숙함.
- 전공분야도 위정성(俞正聲)만 공업 계열이고, 나머지 6명은 인문사회 계열 전공자로 과거 이공 계열 전공자 중심의 기술관료 특성에서 탈피함.
 - ※ 중국 정치 엘리트 변천: 혁명관료(1, 2세대) → 기술관료(3, 4세대) → 일반관료(5세대)

표 1. 18기 중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명단

이름	출신 (나이)	학력	전직	계파	주요 경력 및 특이사항	직책	예정임기
시진핑 (習近平)	陝西 (59)	칭화대 학사 칭화대 박사(법학)	정치국 상무위원 국가부주석 군사위 부주석	태자당	福建省 당서기 浙江省 당서기 上海市 당서기	당총서기 국가주석 군사위 주석	~2022년
리커창 (李克強)	安徽 (57)	베이징대 학사 베이징대 박사(경제학)	정치국 상무위원 부총리	공청단	共青團 제1서기 河南省 당서기 遼寧省 당서기	국무원 총리	~2022년
장더장 (張德江)	遼寧 (66)	연변대(조선어) 김일성대(경제학)	충칭시 당서기 부총리	상하이방	吉林省 당서기 浙江省 당서기	전인대 상무위원장	~2017년
위정성 (俞正聲)	浙江 (67)	하얼빈 군사공정 학원	상하이 당서기	태자당	건설부장 湖北省 당서기	정협 주석	~2017년
류윈산 (劉雲山)	山西 (65)	중앙당교(당정관리)	중앙선전부장	상하이방/ 공청단	內蒙古 부서기	중앙서기처 서기 국가부주석	~2017년
왕치산 (王岐山)	山西 (64)	서북대학 학사	부총리	태자당	인민은행 부행장 북경시장	중앙기율위 서기	~2017년
장가오리 (張高麗)	福建 (66)	샤먼대(통계학)	텐진 당서기	상하이방	廣東省 심천시장 山東省 당서기	상무 부총리	~2017년

자료: 언론보도 종합.

■ 리커창(李克強)이 총리를 맡아 국정 전반을 챙기는 가운데, 장가오리(張高麗)가 상무 부총리로서 경제 전반을, 왕양(汪洋)이 산업·에너지·교통·통신, 마카이(馬凱)가 재정·금융·무역, 류연둥(劉延東)이 농업·수자원, 왕후닝(王滄寧)이 외교 분야에서 부총리로서 경제실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⁴⁾

- 리커창은 베이징대학 경제학 박사로서, 공청단 제1서기를 거쳐 허난성(河南省)과 랴오닝성(遼寧省)에서 지방 행정 경험을 쌓았으며, 부총리로서 도시화, 공업화, 농업현대화(三化)를 주도해 왔음.⁵⁾
- 장가오리는 첫 경력으로 석유부(石油部)에서 14년간 근무한 후 광둥성과 산둥성을 거쳤으며, 텐진에서 집중 투자를 통한 경제개발을 이끈 경력을 가지고 있음.
- 마카이는 물가국(物價局) 부국장을 역임한 후 2003~08년 동안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으로 재직하며 거시경제 관리, 에너지 정책, 서부개발 등에 관여해온 정통 경제관료임.
- 왕양은 안휘성 부성장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을 거쳐 광둥성 서기를 역임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광둥성의 경제개혁을 이끈 실세형 관료임.
- 류연둥은 주로 중앙 행정부서에서 근무하여 지방실무나 경제업무 경험이 없어 농업 부문을 맡은 것으로 보임.
- 왕후닝은 푸단대학 국제관계학 교수 출신으로 외교 정책을 보좌해왔음.

4) 2013년 2월에 열리는 제18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 회의(18기 2中全會)를 통해 중앙위원 이하의 주요 보직이 결정되며, 2013년 3월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국가 주석, 총리, 각 경제부 부장 등 행정부의 인선이 비준됨.

5) 2012년 11월 13일 리커창은 산둥성 공산당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중국경제의 발전동력으로서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현대농업화 등 신사화(新四化) 추진을 강조함(財經網, 2012. 11. 13).

표 2. 18기 기타 정치국원 명단

이름	출신 (나이)	학력	전직	직책(예상)	비고
리위안차오 (李源潮)	江蘇 (62)	복단대 학사 북경대 석사 중앙당교 박사(법학)	조직부장	전인대 제1부위원장	2017년 상무위원 진입 가능
왕양 (汪洋)	安徽 (57)	중앙당교 학사 중국과기대 석사(공학)	광둥 당서기	부총리(산업·에너지)	광둥 모델로 주목 받음 2017년 상무위원 진입 가능
류연둥 (劉延東)	江蘇 (67)	길림대학 법학박사	국무위원(특별한 직책 없음)	부총리(농업·수자원)	여성 2017년 퇴임
장춘셴 (張春賢)	河南 (59)	하얼빈공업대	신장 서기	조직부장	시진핑의 측근 2017년 상무위원 진입 가능
맹젠주 (孟建柱)	江蘇 (65)	상하이기계학원	공안부장	중앙정법위 서기	2017년 퇴임
류치바오 (劉奇葆)	安徽 (59)	지린대학 경제학	쓰촨성 서기	중앙선전부장	
자오러지 (趙樂際)	山西 (55)	베이징대 철학과	산시성 서기	신장위구르자치주 당서기	
왕후닝 (王滬寧)	山東 (57)	푸단대 국제정치학	중앙서기처 서기	부총리(외교)	
마카이 (馬凱)	上海 (66)	런민대 정치경제학	국무원 비서장	부총리(재정·금융)	張高麗와 함께 경제 담당 2017년 퇴임
리잔수 (栗戰書)	河北 (62)	허베이사범대	중앙판공처 주임	현직 유지	
리젠궈 (李建國)	山東 (66)	산둥대 중문과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정협 제1부 주석	2017년 퇴임
귀진룽 (郭金龍)	江蘇 (65)	난징대 물리학과	베이징시 서기	현직 유지	2017년 퇴임
한정 (韓正)	浙江 (58)	화둥사범대	상하이 시장	상하이시 서기	
쑤춘란 (孫春蘭)	河北 (62)	안산공업기술대	푸젠성 서기	텐진시 서기	여성
쑤정치아이 (孫政才)	山東 (49)	농림과학원 작물재배 전공	지린성 서기	충칭시 서기	6세대의 선두주자
후춘화 (胡春華)	湖北 (49)	베이징대 중문과	네이멍구 서기	광둥성 서기	6세대의 선두주자
판창룽 (潘長龍)	遼寧 (65)	공산당중앙당교	군사위 부주석	현직 유지	2017년 퇴임
쉬치량 (許其亮)	山東 (62)	공군 제5 항공대	군사위 부주석	현직유지	

자료: 언론보도 종합.

나. 공산당 당장(黨章) 개정과 경제정책

■ 이번 공산당 당장 수정은 중국공산당 창당 이래 19차 수정이며, 개혁·개방 이후 일곱 번째 수정임.

- 15차 당대회(1997년)에서 덩샤오핑 이론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에 이어 당의 지도사상으로 추가되었고, 16차 당대회(2002년)에서는 장쩌민의 '삼개대표' 중요사상이 지도사상의 하나로 추가되었음.

표 3.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 당장 수정과 당대회 핵심 경제 이슈

기 간	당장 개정의 주요 내용	당 대회의 핵심 경제 이슈
12차 (1982. 9. 1~11)	· 개인 숭배금지 명문화	·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건설 ·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신국면
13차 (1987. 10. 25~11.1)	· 차액선거제도 도입 명문화	·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의 길
14차 (1992. 10. 12~18)	·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한 개 중심, 두 개 기본점’ 노선 당장 삽입	· 체제개혁 목표=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 경제 건설, 개혁·개방+4대 기본원칙
15차 (1997. 9. 12~18)	· 덩샤오핑 이론 당의 지도사상 확립	· 소유제, 국유기업 개혁
16차 (2002. 11. 8~14)	· 삼개대표 중요사상 지도사상 삽입	· ‘소강사회’ 건설 목표 설정 ·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17차 (2007. 10. 15~21)	· 과학적발전관 당장 내용 중 삽입	· 과학적 발전관 · 발전방식의 전환: 조화사회 건설, 總量발전 → 人均발전 · 생태문명 ·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18차 (2012. 11. 8~14)	· 과학적발전관 지도사상 격상 · 생태문명 건설의 당장 삽입	·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 · ‘전면적 소강사회’ 완성 · 생태문명 건설

자료: 필자 작성.

■ ‘과학적 발전관’의 공산당 지도이념 격상

- 후진타오 시대에 제기된 ‘인본주의(以人爲本) 중심의 전면적, 협조적,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서 ‘과학적 발전관’을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삼개대표’ 중요사상과 함께 중국공산당의 행동지침을 제공하는 지도이념으로 격상시킴.
- o ‘총강’에서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삼개대표’ 중요사상과 과학적 발전관을 자기의 행동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함.⁶⁾

■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개념을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론체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로 재구성하여 당장에 삽입함.⁷⁾

- 후진타오 시대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가 확립되었다는 내용을 당장에 추가함.
- o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道路): 경제건설 중심, 4항 기본원칙과 개혁·개방의 견지 아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건설하는 것을 지칭함.
- o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론체계’는 덩샤오핑 이론, ‘삼개대표’ 중요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지칭함.
- o 경제 분야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는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의 공동발전을 하는 기본적인 경제제도와 이를 기초로 한 경제체제 등 각종 구체적 제도를 의미함.

6) 제17차 당대회의 <당장(수정안)>에서 ‘과학적 발전관’이 삽입되었지만, 당시에는 당의 총체적 지도이념 수준이 아닌, 본문 중 한 단락에서 과학적 발전관을 정책이념으로 발전시킨다는 수준이었으나, 18차 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의 지도사상 중 하나로 격상됨.

7) “개혁개방 이래 우리가 얻은 일체의 성과와 발전의 근본원인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열었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론을 형성하였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확립한 결과이다(改革开放以来我们取得一切成绩和进步的根本原因, 归结起来就是开辟了中国特色社会主义道路, 形成了中国特色社会主义理论体系, 确立了中国特色社会主义制度)”.

- 당장에 ‘생태문명 건설’ 부분을 대폭 추가함으로써 ‘오위일체(五位一體)’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구성요소를 제기함.
 - ‘생태문명 건설’이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과 함께 ‘아름다운 중국(美麗中國)’과 중화민족의 영원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가치임을 확인하고, 당장에 삽입함.
 -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내용을 기존의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의 ‘사위일체(四位一體)’⁸⁾에 ‘생태문명 건설’을 추가하여 ‘오위일체(五位一體)’로 확대함.
 - 아울러 중국 공산당이 ‘생태문명 건설’을 영도한다는 조항도 추가함.
- 중국경제의 발전동력으로 종전의 ‘3화(공업화, 도시화, 현대농업화)’에 ‘정보화’를 추가하여 ‘4화’추진을 강조함.
 - 아울러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의 동일한 속도(同歩)로 발전시켜 사회주의 신농촌을 건설하고, 중국 특색의 신형공업화) 및 혁신형 국가를 건설한다’라고 명기함으로써 4개 동력의 균형 및 조화 발전을 강조함.
-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과 사회주의 핵심가치체계 건설 강화’를 추가함으로써 문화강국 건설과 지주산업의 하나로서 문화산업 육성 방침을 밝힘.

다. 18차 당대회 보고와 주요 경제정책 중점

- 18대 당대회 <보고>는 총 12개 장으로 구성됨.¹⁰⁾
 - 제17차 당대회 보고와의 차이점은 전반부 중국식 사회주의 이념과 노선 부분을 대폭 축소한 것임.
 - 17차 당대회 <보고>의 ‘2장 개혁개방의 위대한 역사, 3장 과학적 발전관 실현’ 부분을 18차 대회 <보고>에서는 ‘2장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로 통합하고, 그 대신 후반부에 ‘8장 생태문명 건설’ 부분을 추가로 구성함.
- 전면적 소강사회의 완성 목표 제시
 -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과 도농주민 1인당 평균소득을 2010년의 두 배로 증대시킨다는 목표임.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향후 2020년까지 매년 7%의 성장이 필요함.

8) 덩샤오핑은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兩個文明’ 건설을 주장하였고, 이를 기초로 12기 6중전회(1986년)에서는 “경제건설을 중심에 두고 경제체제개혁, 정치체제개혁, 정신문명 건설을 강화”한다는 경제-정치-문화의 ‘三位一體’를 제기하였음. 17기 당대회 보고에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내용으로 경제, 정치, 문화, 사회의 ‘四位一體’를 제기하였음.

9) 신형공업화란 정보화를 결합한 에너지 절약형 공업화를 지칭함

10) 각 장의 구성은 1장 지난 5년 및 10년 공작 평가, 2장에서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달성, 3장에서는 전면적 소강사회 완성과 개혁개방의 전면적 심화 목표, 4장에서는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 완비와 경제 발전방식 전환 가속화, 5장에서는 정치체제 개혁, 6장에서는 문화 강국 건설, 7장에서는 민생과 사회관리, 8장에서는 생태문명 건설, 9장에서는 군 현대화, 10장에서는 일국양제와 조국통일, 11장에서는 평화발전의 국제관계, 12장에서는 당 건설의 내용을 포함함.

- GDP: 5조 7,394억 달러(2010년, 세계 2위) → 약 11조 5,000억 달러(2020년)

※ 참고: 2010년 기준 미국 GDP 14조 4,471억 달러

- 2020년 1인당 GDP는 2020년 2010년(30,015 위안)의 두 배인 6만 위안으로 증가하고, 2010년 4,434달러에서 2020년 약 9,000달러에 달하게 됨.

■ ‘오위일체’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 ‘생태문명 건설’을 새로운 구성요소로 추가함.

-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내용을 기존에는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의 ‘사위일체(四位一體)’로 설명했지만, 이번 보고에서는 ‘생태문명 건설’을 추가하여 ‘오위일체’로 설명함. 이를 반영하여 보고 제8장에 ‘생태문명 건설 추진’을 새롭게 추가함.

- 경제건설은 경제체제 개혁과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정치건설은 정치체제 개혁을, 문화건설은 문화강국 건설과 문화 산업화를, 사회건설은 사회공평을 위한 민생개선과 사회안전망의 확충, 주민수입 증대, 교육과 취업 확대 등을, 생태건설은 자원절약 및 환경친화형 사회의 건설을 의미함.

■ ‘신사화(新四化)’의 제기: 경제발전 동력으로서 정보화를 강화함.

- 당대회 보고에서 ‘신형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를 제기하고, 특히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의 동반 발전을 강조함.

o 동시에 정보화와 공업화의 융합 발전(深度融合), 공업화와 도시화의 시너지 창출(良性互動), 도시화와 농업현대화의 상호협조(相互協調)를 제기함.

※ 17대 당대회 보고에서는 공업화, 도시화, 시장화, 국제화를 제기함.

■ 경제발전방식의 전환 가속화

- 경제발전방식 전환의 관건인 경제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그 동력으로서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가속화할 것임을 밝힘.

- ‘경제체제 개혁’을 위해서는 공유제 발전과 비공유제 발전 장려, 현대시장체계의 건전화, 재정·세제 개혁 강화, 금융개혁 확대(환율과 금리 시장화 개혁, 인민폐 자본항목 자유태환 점진 실현, 민영 금융기구 발전 가속화)에 역점을 둘 것임을 밝힘.

-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의 중점이 수요구조 개선(국내 소비 확대), 산업구조 고도화(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서비스 산업화), 지역간 협조발전 촉진, 도시화 추진에 있음을 밝힘.

■ 기타

- 문화건설(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 사회건설(민생개선과 사회안정 강조), 국방건설(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한 국방현대화 적극 추진), 대외관계(평화발전노선 유지 강조) 및 양안관계 분야의 내용도 기존 당대회 및 정책문건의 입장을 재차 강조함.

표 4. 18차 당대회 보고의 주요 내용(경제 분야)

분야	주요 내용	특징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기본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 주체 지위 견지 · 사회생산력 해방과 발전 견지 · 개혁개방 추진 견지 · 사회공평 유지보호 · 공동부유의 길 견지 · 사회조화 촉진 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본주의, 법치주의 · 경제·정치·사회·문화·생태문명 건설 · 이론·제도·과학기술·문화·기타 방면의 혁신 · 권리·기회·규칙 공평, 공평한 사회보장체계 · 국민수입 분배 조정, 재분배 조절력 강화 · -
소강사회 전면 건설과 개혁·개방 전면 심화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의 지속 건강 발전 · 인민민주 부단 확대 · 문화 소프트파워 강화 · 인민 생활수준의 전면 제고 · 자원절약 환경친화형 사회 건설 ·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비 · 문화 관리·생산경영기제 완비 · 생태문명제도 건설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에 2010년 대비 GDP와 1인당 주민수입 2배 · 법치국가 건설 · 문화산업의 국민경제 지주산업 육성 · 공공서비스 균등화, 교육·취업, 수입분배 격차축소, 중등 소득계층 확대, 사회보장, 보장성 주택 · GDP 생산 단위당 에너지 소비와 배출감소(이산화탄소), 삼림복개율 제고 · - · - · -
사회주의 시장경제 완비와 경제발전 방식 전환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체제 개혁 심화 · 혁신 구동형 발전 전략 실시 ·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 추진 · 도농간 통합 발전 · 개방 수준 전면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제 발전과 비공유제 발전 장려, 현대시장체계 건전화, 재정·세계 개혁 강화, 금융개혁 심화(환율과 금리 시장화 개혁, 인민폐 자본항목 자유태환 점진 실현, 민영 금융기구 발전 가속화) · 과학기술체제 개혁, 지적권 보호 · 발전방식전환의 중점: 수요구조 개선, 우위산업구조 개선(전략적 신흥산업, 현대서비스업), 구역협조 발전촉진, 도시화 추진, 호구제도 개혁(시민화) · 현대농업 발전, 농촌SOC 건설지원 강화, 농민수입 증대, 토지수용제도 개혁 · 수출·수입 모두 중시하여 무역균형 달성, 외자유용 효율 제고, 해외투자 강화, FTA 확대
생태문명 건설 강력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개발전략 · 자원절약 촉진 · 환경보호 강화 · 생태문명제도 건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공능구 전략 강화, 해양강국 건설, 해양자원 개발역량 강화 · 에너지 생산·소비 혁명 추진, 수원지 보호와 용수총량 관리, 경지보호 엄수, 자원탐사·보호·합리적 개발, 순환경제 발전 · - · 자원가격·세제·비용 개혁, 에너지절약권·배출감축권·물이용권 시범거래 실시
민생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족스러운 교육 · 질 좋은 고용 확대 · 주민 수입 증대 · 도시·농촌 통합형 사회보장체계 · 인민의 의료 수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분배제도 개혁(1차 분배와 재분배의 결합), 기업의 임금제도 개혁, 수입 분배질서 규범화 · 사회보험제도 개혁·정비, 사회보장기금 확대, 보장성주택 공급, 인구노령화 대비 · -

자료 : 당 대회 보고를 기초로 필자 작성.

3. 신(新)지도부의 경제정책 방향 전망

■ 신지도부의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은 2013년 가을에 개최되는 18기 3중전회에서 구체화될 계획이며, 그 이전까지는 12·5규획(2011~15년)에 나타난 ‘균형성장을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의 경제정책 기초를 2015년까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신지도부의 경제정책 핵심은 △ 경제발전방식의 전환 △ 민생개선 △ 시장화 개혁 △ 소프트 파워 제고 △ 대외개방 확대 등임.

1) 경제발전방식(경제체제의 구조조정)의 전환

- (경제체제의 구조조정) 국내소비 확대, 도시화, 산업고도화를 통한 경제구조와 산업구조 조정을 가속화함.
 - (내수소비 확대) 소비진작책을 통해 소비를 연평균 15% 증가시켜 2015년까지 전체 소비재 판매액 32조 위안(2010년 15.7조 위안) 달성을 목표로 함.
 - 중국 상무부는 「국내 무역(상업) 발전 12·5규획」을 발표하여 2015년 최종소비율을 50%(2010년 47.4%)로 끌어 올리고, 생산물자 소매판매액은 76조 위안으로(연평균 16% 증가), 온라인 거래규모는 18조 위안(연평균 30% 이상 증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힘(2012년 9월 1일).
 - (도시화) 도시화율을 2010년 47.5%에서 2015년 51.5%로 제고할 계획이나 2011년에 이미 51.3%에 도달하여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¹¹⁾
 - (서비스화) 서비스업의 GDP 비중을 2010년 43%에서 2015년 47%로 제고하려 함(2011년 43.1%).
 - (7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12·5규획에서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제시하면서 “2030년까지 3단계 전략 목표”를 설정함.
 - 7대 전략산업¹²⁾ 생산/GDP 비중: (2010년) 3% → (2015년) 8% → (2020년) 15% → (2030년) 세계 최고수준으로 육성

2) 경제체제 개혁: 시장화 개혁의 가속화

- 신지도부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 확립과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경제체제 개혁’이 관건이 될 것임.
 - 경제체제 개혁은 대내적으로는 불균형 해소와 에너지 절약형·환경친화형 사회 건설을 위한 개혁, 중국경제의 국제화를 위해 필요한 금융개혁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시장화 개혁의 핵심으로는 세제개혁, 금융개혁(금리 및 환율 결정의 시장화),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자본시장 개방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분배제도 개혁) 당대회 보고에서 ‘공동부유(共富)는 사회주의의 근본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분배제도를 개혁하고 재분배에 의한 조절기능을 강화하여 분배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힘.
 - 1차 분배를 중심으로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로 하고 다양한 방식의 분배제도를 병행하여 추진한다”라는 원칙 외에는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2008년 중국의 음성수입(회색수입)은 9조 3천억 위안으로 당해연도 GDP의 30%에 달하는 규모이며, 음성소득의 80%를 상위 20%의 고소득층이 차지하고 있고, 62%는 상위 10% 고소득층에 귀속되어 있음.¹³⁾

11) 중국의 도시화율이 51.5%에 도달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중국 외지에서 도시로 유입된 농민공 수가 2억 6,800만 명(2012년 9월 말 현재)임을 고려할 때 도시호적(호구) 인구를 기준으로 한 도시화율은 35% 정도에 머물 것으로 추정됨. 중국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호구제도 개혁과 더불어 농민공의 도시 시민화를 추진할 계획임(당대회 보고, 제4장 3항).

12)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신시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제조업,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13) 中國人民網(2012. 1. 11).

- (세제개혁) 세제개혁을 위해 보편적 징수 원칙에 기초한 소득세, 부가가치세(증치세), 소비세, 재산세(상속세와 증여세 등), 자원세, 환경 관련세 등에 대한 개혁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됨.
 -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영업세 개혁을 통한 감세정책과 자원세 등 환경·자원에 대한 증세정책을 병행하고, 재분배를 위한 재산세(상속세, 증여세) 도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 및 세정 권한을 점차 지방정부로 이양할 것으로 전망됨.
- (금융개혁) 금융개혁을 위해서는 금리의 시장화,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화하고, 점진적인 위안화의 자유태환을 시행해갈 것으로 예상됨.
 - 당대회 보고에서 금융개혁 방향으로 금리와 환율의 시장화 개혁, 인민폐 자본항목의 점진적 자유태환 실현, 민영 금융기구 발전, 금융안정망 구축 등을 제시하였음(4장 1항).
 - 이와 관련하여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금융업 발전 및 개혁 12·5규획’에서 금융산업 발전목표를 설정하고¹⁴⁾ 점진적인 금리와 위안화 환율 시장화,¹⁵⁾ 위안화를 이용한 무역결제 확대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점진적인 자본항목 자유태환 추진,¹⁶⁾ 금융보험제도 등 금융안정망 도입 방침 등을 발표함(2012년 9월 17일).

3) 민생개선 강화

- 신지도부는 만족스러운 교육, 양질의 고용 창출, 주민소득 증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중심으로 한 민생개선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
 - (고용확대) 5년간 도시 지역에서 신규 일자리 4,500만 개를 창출하여 도시등록실업률을 5% 이하로 유지함.¹⁷⁾ 특히 당대회 보고에서는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둘 것임을 밝힘.
 - (주민소득 증대) 최저임금 표준을 매년 13%씩 인상하여 2015년 평균임금의 40%선까지 끌어올리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가처분소득을 매년 7%씩 성장시킴으로써 2020년에는 2010년의 두 배로 끌어올릴 계획임.
 - (주택 보급)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서민형 보장성 주택을 1,600만호 건설할 계획임.
 - (사회보장) 도시호적 보유 주민(3억 5,7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양로보험 구축, 도농삼대기본의료보험(城鄉三大基本醫療保險)¹⁸⁾ 가입률 3%포인트 제고, 평균수명 1년 연장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14) 2015년 금융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5% 내외(2000년대 평균 4.42%)로 끌어올리고, 비금융기업의 직접금융비용을 사회총용자 규모의 15%(2006~10년 평균 11.06%)로 끌어올릴 계획임.

15) 기준금리에 대한 상한과 하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에서 기준금리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은행의 시장조작 효과를 강화한다는 원칙 아래 금리의 시장화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함. 중국은 2012년 6월과 7월 금리시장화 조치의 일환으로 상업은행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예금금리의 상한을 기준금리의 110%로 정하고, 대출금리의 하한을 기준금리의 70%로 설정함.

16) 점진적으로 인민폐 자본항목의 자유태환을 추진하고, 직접투자의 편리성을 위해 직접투자의 기본적인 자유태환을 실시함.

17) 중국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2년 9월 말 현재 중국 도시지역의 등록실업률은 4.1%로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음.

18) 도농삼대기본의료보험은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을 말하며, 2010년 기준 도농삼대 기본의료보험 가입자는 12억 6천만 명임.

4) 대외경제정책 방향: 개방 수준의 전면적 재고

- (무역균형과 해외투자 확대) 당대회 보고에서 '적극적이고도 주동적인 개방전략'을 취할 것임을 밝히고, 무역균형, 외자이용 효율성 제고, 해외진출 강화, FTA 전략 강화 등을 밝힘.
- 이와 관련하여 12·5규획에서도 대외경제전략 기조인 '세계경제 거버넌스와 지역협력에의 적극적 참여'로 명시함. IMF와 세계은행 등 선진국 주도의 국제경제 체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개도국 및 주변국과 '지역협력을 강화함.
- (FTA 전략 강화) 중국은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양자간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¹⁹⁾ 중국은 한·중 FTA 협상 개시에 이어 한·중·일 FTA와 RCEP 협상 개시에 동의하였음.
- 선별적 외국인직접투자(FDI) 수용을 통한 산업재편과 고도화를 유도하고, 자원확보와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해외투자전략(走出去)을 추진함.

4. 평가 및 시사점

- (중국경제의 중성장 시대 진입) 중국경제는 초고속 성장 시대에서 벗어나 중성장 시대에 진입하게 됨.
- 신지도부가 구조조정과 균형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을 추구함에 따라 성장률이 점차 하락하여 중성장(7~8%) 시대에 진입할 것이며, 중국은 이미 12·5규획에서 목표 성장률을 7%로 하향 조정함.
 - ※ 목표 성장률: 10.5(2001~05년): 7.0%(실적 9.5%) → 11.5(2006~10년): 7.5%(11.2%) → 12.5(2011~15년): 7% (전망 8.6%)
- 2016~20년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7%로 하락하고, 신지도부가 임기를 마치는 2020년대에는 5%대 성장시대에 접어들 전망임(World Bank & DRC 2012, China 2030).
- o 2020년까지 소강사회 완성을 위해 GDP를 두 배로 늘린다는 방침에 따라 당분간 최소한 7%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려 할 것임.

표 5. 세계은행과 중국 국무원의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연도	1996~2010	2011~2015	2016~2020	2021~2025	2026~2030
성장률(%)	9.9	8.6	7.0	5.9	5.0

자료: China 2030(2012. 2).

19) 중국의 FTA 전략은 수출시장 다변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음. 2012년 10월 말 현재 중국은 15개국과 FTA를 발효하였음. FTA 체결국가가 중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8.0%에서 2008년 24.6%까지 축소되었으나, 최근 3~4년간 중국의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다시 상승하여 2012년에 28.1%까지 회복됨. 특히 아세안이 중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7.0%에서 2008년 8.0%로 확대된 데 그쳤으나, 무관세화가 추진되면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상승하여 2012년에 9.7%까지 높아짐.

- (대중 수출입 둔화 불가피) 중국의 성장률과 수출 둔화는 곧바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둔화로 이어짐.
 - 특히 가공무역을 위한 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로 인해 중국 수출둔화에 따른 영향이 크고, 중국 내수시장 접근성도 취약함(가공무역과 보세무역 등 재수출용이 64.8% 점유).
 - 주요국의 중국 내수용 일반무역시장 점유율(2011년): 전체 52.8%, 일본 51.7%, 미국 66.7%, 한국 34.1%, 대만 27.1%
 - 중국이 당대회를 통해 무역수지 흑자가 아닌 '균형무역' 달성을 목표로 공언함에 따라 위안화 절상을 지속적으로 용인할 공산이 크며, 이는 중국의 수출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임.

- (요소가격 상승과 투자환경 변화) 지속적인 임금인상 및 노동자 권익향상 외에도 법제도가 투명화되고 지방관료의 재량권이 축소되는 등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당대회를 통해 주민소득 증가율을 GDP 성장률과 함께 증가시키겠다고 공언한 만큼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노동에 대한 댓가가 더 커질 것임.
 - 또한 근로인민의 법적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따라 노조 설립 같은 친노동적 제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법치주의 원칙이 더욱 확대되어 적용되며, 관료의 임의적 정책결정에 대한 제약이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사적 관계나 편법을 통한 사업 운용을 지양하고, 철저한 준법 경영을 실시해야 할 것임.
 - 이와 더불어 환경문제를 정치·경제·문화·사회와 함께 5대 발전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향후 환경 관련 규제가 더 엄격해지는 한편, 환경 관련 시장도 열릴 것으로 전망됨.

- (한·중 경제협력 확대 종합대책) 중국경제의 중성장 시대 진입, 중국의 발전방식 전환에 따른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력 분석과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함.
 - 한·중 경제협력 환경개선 대책, 대중국 주력 수출상품구조의 전환과 수출시장 다변화 대책, 중국의 신성장 축인 지방과의 경제협력강화 대책, 중국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종합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함.

- (한·중 경험 환경개선 과제) 신지도부와의 경제협력 틀로서 한·중 FTA, 무역결제 통화협력 등을 통한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협력 강화가 필요함.
 - (한·중 FTA의 조속한 타결) 한·중 FTA의 조속한 체결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한·중 무역구조를 감안한 중간재와 자본재 분야의 조기 관세인하 추진, 서비스 시장개방 확대, 전략적 신흥산업에서 협력강화 등이 필요함.
 - (한·중 금융 및 무역결제 통화협력) 국제금융시장에서 중국의 위상 강화, 위안화의 국제화, 자본시장 개방 등에 맞추어 한·중 간 통화스왑 확대와 무역결제 통화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신수요 창출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수출 확대) 도시화, 서비스화, 자원절약 및 친환경 사회 건설, 민생 등 중국의 발전방식 전환과 관련된 새로운 기회에 주목해야 함.
 - (도시화 관련 수요 증대) 중국은 에코시티·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형태의 도시개발과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중국에서는 매년 2천만 명이 넘는 신규 도시 인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설·IT·환경·유통·의료·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 (자원절약과 환경친화형 수요 증대) 자원절약형·환경친화형 녹색성장을 중시하면서 관련 분야에서 새로운 수출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 (서비스 관련 시장 개척) 중국의 소득증대로 시장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헬스케어·교육·콘텐츠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에서 새로운 진출 기회를 마련함.

-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중국경제의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지방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함.
 - 지방 당서기 중 일부가 이번에 중앙정치국에 진입했으며,²⁰⁾ 향후 중국의 제6세대 최고 지도부를 구성할 이들이 지방 당조직 일선에 배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0) 순정차이(孫政才) 지린성 당서기(충칭시 당서기 겸임), 후춘화(胡春華) 네이멍구 당서기 등이 25인의 정치국 위원에 당선됨.

부록

부표 1. 역대 당대회의 핵심 이슈와 경제 전략

당 대회	시기/ 대표인물	핵심 이슈	주요 경제 전략	배경 사건 및 정책
12	1982. 9/ 덩샤오핑, 후야오방	사회주의 경제 건설	자원 집중을 통한 경제 건설 국유경제의 주도적 지위 유지 자력갱생과 대외 기술 습득의 동시 추진	1978년 11기 3중전회 개방개혁 선언 1980년 경제특구 설립
13	1987.10/ 덩샤오핑, 자오쯔양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정책	경제체제 개혁 기술진보와 노동효율 제고를 통한 경제발전 사회 총수요와 총공급 사이의 균형 대외개방 확대	1984년 연안도시 개방 1988년 기업법(정부와 기업의 분리)
14	1992.10/ 장쩌민, 주룽지	사회주의 시장경제 수립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위한 개혁 가속화 대외개방 지속적 확대 지역경제 발전 촉진 특구전략 수립	1988년 물가폭동 1989년 천안문 사태 1990년 주식시장 설립 1992년 남순강화
15	1997. 9/ 장쩌민, 주룽지	덩샤오핑 이론 확립	소유제도 개혁 국유기업 개혁 시장 메커니즘 활성화 거시경제 조절 시스템 구축	1993년 곡물가격 자유화 1993년 회사법(근대적 기업제도) 1994년 分稅制(중앙의 징수권 강화) 1996년 경상항목 자유태환
16	2002.11/ 후진타오, 원자바오	3개 대표론, 小康 사회건설, 사회주의 현대화	산업 업그레이드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농촌경제 진흥 및 도시화 촉진 서부대개발 국유자산관리 체제 개혁	1999년 국유은행 부실채권 처리 2000년 해외진출전략(走出去) 2001년 WTO 가입
17	2007.10/ 후진타오, 원자바오	과학적 발전관,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자주창신 능력제고 경제 발전 방식 전환 산업 업그레이드, 도농 통합 발전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정책 역내 경제권 형성 금융개혁	2004년 국유은행 주식제 개혁 2005년 비유통주 개혁 2006년 농업세 폐지 2007년 물권법(개인재산보호)
18	2012.11/ 시진핑, 리커창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 과학적 발전관, 소강사회 완성	민생안정을 위한 GDP와 주민소득 동반성장 경제 발전 방식 전환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정책 서비스형 정부 新공업화·정보화·도시화·농업현대화 농민공의 점진적 시민화 균형무역 달성 외자유입의 효율성 제고	2008년 신노동법(노동자보호) 2008년 신소득세법(외자혜택 철폐) 2009년 위안화 국제화 추진 2009년 경기부양 2010년 7대 전략산업 발표 2011년 부동산세 시범 도입

자료: 필자 작성.